곳곳 부서지고 곰팡이 핀 위패 …쓥쓸한 독립역사 현장

르포-광주·전남 3·1절 사적지 관리 실태 보니

장성 삼일사 내부 거미줄 겹겹이
함평 낙영재 앞 태극기 찢어지고
무안읍장터 등 표지판조차 없어
광주·전남 독립현충시설 137곳
보훈처·지자체 유기적 협조 필요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장성군 북이면에 있는 삼일사 내부에 교자상과 그릇 등 제수용품이 방치돼 있고(왼쪽), 함평군 월야면 낙영재 앞의 태극기는 찢어진 채 펄럭이고 있다.

3·1독립운동이 올해로 104주년을 맞았지만, 정작 광주·전남 곳곳의 3·1 만세운동 현장과 사적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손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전수해야 할 역사 현장이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삼일사'는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았는지 곳곳이 부서진 채 방치돼 있었다. 이곳은 장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류상설 등 13명의 항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9년 세운 곳이다.

삼일사 내부 곳곳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었고, 천장의 황토가 떨어져나가 바닥은 온통 흙투성이였으나 치우는 이조차 한 명 없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독립운동가들의 위패는 곳곳에 까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참배객들이 쓸 만한 향이나 양초도 따로 준비돼 있지 않았다.

내부 한 켠에는 신문지로 아무렇게나 싼 제수용품을 담은 종이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종이상자를 만져 보니 낡아서 부스러질 정도였다.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낙영재'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은 1919년 당시 한문서당으로 김기택 등 16명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던 곳으로, 1943년 태풍으로 붕괴된 이후 일본 경찰의 방해로 복구하지 못하다 2005년이 돼서야 복원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3·1절을 하루 앞두고도 낙영재 앞 깃대에는 해지고 찢어진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인근 화장실에서는 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낙영재 내부에는 태극기, 옷걸이 등을 아무렇게나 쌓아 둔채 보관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2019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은채 방치돼 있다.

역사 기록을 통해 사적지로 확인이 됐는데도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안내판조차 세우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전통시장' 일대는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곳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지정한 국내항일운동사적지에 해당하지만, 현장에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석이나 표지판조차 없다.

무안군 옛 무안읍장터 터, 목포시 옛 영흥학교 터 또한 교회나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을 잃었고, 인근에는 표지판 하나 없어 이곳이 3·1절 만세시위지라는 사실을 알 방도가 없는 상태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사적지는 땅 주인이나 시설 주인, 지자체가 나서서 신청해야만 현충시설로 등록할 수 있다. 현충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표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주체인 보훈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적지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광주 16곳, 전남 121곳 등 총 137곳이다. 이들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관리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중에는 시설 소유주 등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보훈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나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장성 삼일사의 경우 인근에 살고 있는 유족대표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손이 관리 책임을 외면하고 지자체의 지원 미비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 낙영재에 위패가 모셔진 김용현 애국지사의 며느리 김안래(여·85)씨는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인데도 찢어진 태극기가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사적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3·1운동 최초 발생지, 수피아여학교냐 큰 장터냐

광주시-역사학자 이견 '혼선'

104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자중학교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에서 처음으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3·1절 기념식 장소인 수피아여중은 수피아여고와 함께 일제강점기 광주 3·1만세운동의 발원지"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장 지역 역사학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시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3·1만세운동에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원지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광주 3·1운동 가담자들을 처벌한 1919년 일본 판결문을 보면, 당시 광주교 근처였던 '큰 장터'에서 3·1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1919년 3월 10일 큰 장터 인근에서 30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작은 장터로 갔고, 시민과 수피아여학교 학생 등이 합류해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광주 만세 운동을 주도한 김복현 등은 큰 장이 열리는 3월 8일을 거사일로 정했지만, 선언문 인쇄가 늦어지면서 '작은 장'이 열리는 3월 10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큰 장터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열렸던 작은 장터(부동교)가 광주 만세운동 시초지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 노 원장의 설명이다.

노 원장은 "현재 광주시사에 쓰여진 내용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부분이 많다"며 "당시 광주·전남 최초이자 최대 규모였던 광주 3·1만세운동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홍희 기자 strong@

조선대 비위 의혹 교수 자택·연구실 압수수색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선대 교수 비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조선대 A교수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교수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다 연구비 횡령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발견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A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교원 임용 부당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는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업무방해 혐의에 연루된 제 3자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교수와 함께 입건된 B교수(전임교원)가 다른 대학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조사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전자정보 법의학 감정) 결과와 압수한 증거 등을 분석해 추가조사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단체, 담양 중증장애인 화재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장애인단체가 담양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취약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18일 밤 담양군 대덕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숨진 A(47)씨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면서 "장애인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망한 A씨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의 '소극행정' 탓이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전남장차연 상임대표는 "담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1300명이다. 이들 모두가 대상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은 300명 남짓"이라며 "서비스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탓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